

大學의 財政은 공개되어야 한다

姜 萬 吉
(高麗大 韓國史學科)

세계사가 20 세기의 마지막 10 년대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은 바야흐로 先進國으로 진입한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학문체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이 희망은 좀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虛望이라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유수한 대학의 總長들이 ‘개인적 致富가 아닌’ 학교재정 확보를 위해 不正入學을 감행했다가 추상같은 檢察權에 의해 구속되는 장면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세계 大學史 위에 유례가 없을 일이 몇 번씩 벌어지는 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으로 진입할 희망에 부풀어 있다니 놀랍다 못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하면 심한 표현이 될까?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 당국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총장 구속으로 그 위신을 세우면서 상대적으로 대학의 위신만을 땅에 떨어 뜨리는데도 대학에 몸담고 있는 그 많은 頭腦들은 自救策 하나 강구하지 못한 채 묵묵부답 속수무책이니, 대학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다.

너무 원론적인 말이 될지 모르지만, 진리를 추구하고 미래의 일꾼을 양성하는 대학은 그 사회의 어느 부분보다 虛偽가 없는 진실된 곳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재정 확보책이라는 명분이 있다 해도 한치의 부정한 처사도 있을 수 없는 곳이 대학이며, 이때문에 부정입학에 대한 국민적 지탄도 거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각 대학들, 특히 사립대학들이 현실적으로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로 알려져 있으며, 한때 기부금 입학 등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실현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妙策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예정했던 액수보다 10 퍼센트 이상의 稅金이 더 건히고 지구상의 몇 나라밖에 갖지 못한 高速電鐵을 착공하려는 나라에서, 호화생활 과소비에 들뜬 인간들이 판을 치는 나라에서, 대학들이 재정 확보를 위해 공정해야 할 학생 선발에 부정을 저지르고 그대문에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구속되고 刑을 살아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을 살릴 수 있는 길이란 무엇이겠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결코 상식 이하일 수도 그 이상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대학문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며, 사립대학의 경우 무엇보다도 財源들이 財源을 더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사회가 교육기관 설립자를 존경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그들이 근검 결약하며 깨끗하게 번 돈을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에 환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립 교육기관이라 해도 그것은 결코 私有物일 수 없으며, 그때문에 어느 재단이 제 힘으로 대학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던 그 운영권을 능력있는 다른 재단에게 흔쾌히 넘겨야 함도 상식일 수밖에 없다. 부정입학의 원천적 책임이 대학재정을 파탄에 빠뜨린 재단에 있음도 또한 상식이다.

어느 재단이 대학을 원만히 운영할 능력이 없어졌는데도 대신 말을 만한 재단이 없는 경우 결국 정부가 운영을 전담하는 수밖에 없다. 사립대학이 國立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간접 때문에 大學自律性의 붕괴가 우려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간섭이 선진국 국립대학들의 그것보다 덜하지 않음도 상식이다. 중요한 것은 國立 與否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문화·대학문화의 수준과 大學人의 자세 문제이다. 우리의 通念으로는 제정부실 사립대학의 國立化가 엄청난 變革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재정확보를 위해 총장이 구속되어도 이런 수준의 빈력이 논의되지 않는다는 데 오히려 우리 대학사회의 불행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가?

한편 우리의 생각을 조금 누그러뜨려 보면, 제정이 부실한 대학의 국립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사립대학 재단들 중에는 그 제정을 당장 획기적으로 회복할 제력과 능력은 없다 해도 그 본래의 建學精神만은 건전했고, 그 건학정신을 계속 발전시킴으로써 오히려 대학문화의 다양화·환성화에 이바지한 경우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 사립대학으로서의 위치를 지키면서 정부 보조를 더 받거나, 같은 교육이념을 가진 다른 有産者의 투자를 유도하여 절대 부족한 교원 수를 늘리고 연구시설과 기자재를 더 갖추어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의 재정상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부나 다른 유산자의 보조와 투자가 절실하면 할수록 그 곤란한 재정상태를 명명백백히 公開하는 일이 앞서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우리 학생들 중에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은행융자를 받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방학을 이용하여 土木工務場에서 서두른 노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처절한 實例도 있다.

이런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들이 그 제정을 몇몇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재정확보를 이유로 부정입학을 자행했다가 총장들이 구속되고, 게다가 논의되는 대책이란 것이 기부금입학제 운운 정도라면 그것이야말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財政運營에 어두운 부분이 있고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진리탐구 마당으로서의 대학,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에는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大學財政難 打開의 출발점은 바로 그 財政을 몇몇하게 공개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